

국가에너지효율

2017년까지 23.5% 개선시킨다.



유재인 회장

정부는 최근 국가에너지 이용효율을 2012년까지 13.6%, 2017년까지 23.5% 개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잠정적으로 내놓았다. 최근 개최되었던 제15차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차에너지 수요가 2006년 기준 연평균 2.7%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312백만TOE가 될 전망이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2017년 1차에너지 소비를 예상수요대비 7.3% 절감된 289백만TOE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에너지소비의 증대는 큰 장벽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강력한 절약정책을 시행한 결과 국가의 에너지원단위가 줄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비중도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분명 즐거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듯하다.

정부는 올해까지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의 자발적협약(VA)을 확대해 올해까지 1,375개의 사업장으로 늘릴 예정이며 37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을 실시, 소비절감 잠재량 도출 및 고효율시설로의 투자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현재 34개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을 37개 품목으로 확대해 보급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것은 산업부문에 대한 것으로 수송이나 가정, 상업, 공공부문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은 그리 간단치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가 필요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에너지포트폴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ESCO의 존재성이 빛을 발한다.

1991년 도입된 ESCO사업은 2006년까지 총 9,13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되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에너지절약효과를 내고 있어 신고유가 시대에 활성화가 긴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무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을 펼치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ESCO사업에 대한 자금수요('07년 수요조사액 2,410억원)에 비하여 정책자금 지원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사용가들의 ESCO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ESCO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제사례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 것이다. '에너지'를 잡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등에 올라타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 확보를 둘러싼 자원외교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도 급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SCO는 문제점을 보고 찾아내어 개선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국가에너지효율 개선작업에 ESCO는 분명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된다.